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22.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 ✓ 튼튼한 안보가 믿음직하게 뒷받침합니다.
- ✓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추진합니다.
- ✓ 원칙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를 추구합니다.
- ✓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도 내실있게 준비합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목 차

I. 목표	07
1.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08
2. 원칙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	09
3.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10
II. 추진 원칙	13
1.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14
2.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15
3.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15
III. 중점 추진과제	17
1.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18
2.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22
3.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23
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26
5.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28
【부록】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관련 문답자료	31

I 목표

비핵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

I

목표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담대한 구상」을 통해 지난 30여 년 동안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Deterrence),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며(Dissuasion), 외교·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Diplomacy)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북한의 민생개선과 남북 간 신뢰 조성을 위한 초기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본격적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 비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비핵화와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2022.8.15.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2 원칙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하면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추진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에서 이룬 남북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그 성과는 이어받아 발전시키겠습니다.
-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원칙있는 대북관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세대·정파를 아우르며 소통하겠습니다.
-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2030 세대와 함께하는 통일미래상을 추구하고 국민적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제사회와의 다차원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체계

비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추진원칙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중점 추진과제

- 01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 02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 03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 0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 05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II

추진 원칙

비핵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

II

추진 원칙

1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에 적대 의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해 나가면서, 북한이 도발 시 단호한 대응과 함께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도발에 따르는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레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 뿐입니다.

(2022.8.17.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유연한 상호주의는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 상호 관심사와 차이도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을 겸비한 것으로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질서가 될 것입니다.

3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 윤석열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헌법 제4조가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통한 통일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내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III

중점 추진과제

비핵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

III

중점 추진과제

1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 구현을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2022.10.25. 윤석열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우선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담대한 구상」 초기조치 주요 내용

-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 : R-FEP)
-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동 대금을 활용해 식량·의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
-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협력사업 시범 추진 후 비핵화 단계에 맞춰 사업 확대

- 남북 간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어 경제·정치·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적 차원에서는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 5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가칭)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 남북 간 경제협력

	<p>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p> <p>북한 노후 발전소부터 시범 개보수 후, 여타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현대화</p>
	<p>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p> <p>북한 거점 항만·공항부터 시범 개보수 후, 단계적으로 현대화 확대</p>
	<p>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p> <p>초기조치로 농업 기술 지원 우선 추진, 이후 거점별 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p>
	<p>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p> <p>도(道) 단위 병원 현대화 시범 실시, 이후 단계적으로 병원 및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p>
	<p>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p> <p>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해외 투자유치 적극 지원</p>

-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담대한 구상」 정치·군사 분야 조치 주요 내용

- 
외교적 조치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
-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정착 추진
- 
군비통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추진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의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문화·기후환경·민생 분야 교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 신뢰구축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초기조치 + 포괄적 합의

-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농업)」
※ 협상모멘텀 확보·유지
- 포괄적 합의 도출
 - 비핵화 정의·목표(end state)
 -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 등 로드맵 합의

실질적 비핵화

- | | |
|--|--|
| [경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 [미북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체제 구축 논의 [군사적 긴장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적 신뢰구축 |
|--|--|

완전한 비핵화

- | | |
|---|--|
| [공동번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적 투자·교역 확대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본격 이행 | [미북관계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군사적 신뢰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비통제 본격화 |
|---|--|

2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상호존중과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와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서부터, 경제·인도·사회문화 등 남북협력 의제를 폭넓게 열어두겠습니다.

일관된 원칙 아래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남북관계 추진 과정에서 실용적 접근과 유연함은 잃지 않되, 우리의 국격과 핵심가치는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북 접촉과 회담은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적으로 필요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부터, 방역 위기와 감염병 대응, 심각한 재난상황 대처 등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 민간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지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2.5.16.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한 북한 주민의 자유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 정부는 우선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북한인권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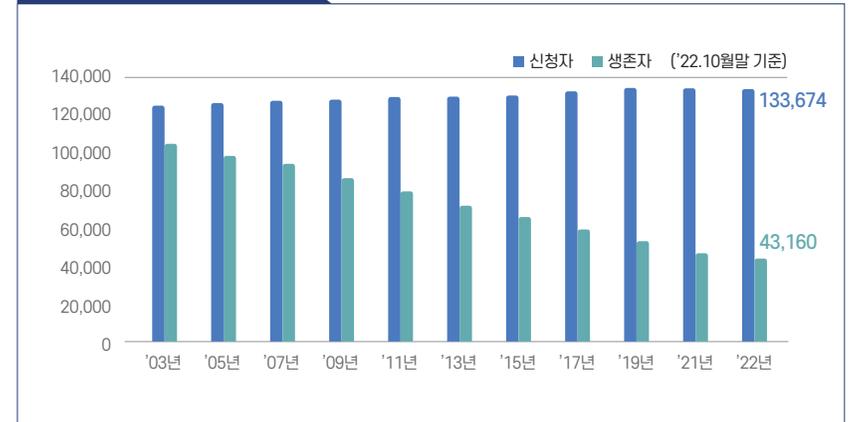
- 근거 북한인권법 제10조~제12조
- 기능 △북한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심의,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규범에 따른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초래된 인도적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이산가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산가족 문제는 조속히 실효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전원 생사확인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등 미래 교류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역류자의 생사확인 과 송환 문제도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대내적으로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공감대를 넓히겠습니다.

국내 이산가족 현황



* 이산가족 상봉현황 : △(대면) '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총 21차례 대면/ 남북 총 4,290가족(20,604명) 상봉 △(화상)'05~'07년동안 총 7차례 화상/남북 총 557가족(3,748명) 상봉

북한이탈주민을 밀착 지원하고 사회 적응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자립하여 통일의 희망이자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기지원체계를 튼튼히 하고,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고용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위기 상황에 취약한 가구와 소외계층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비핵화 이전이라도 가능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 거래말큰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발굴 등 남북 간 공감대가 있는 민족문화·역사 등의 분야에서 중단된 교류가 재개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체육·예술·종교·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방송·언론·통신 분야에서 상호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문화인식을 토대로 방송·언론·통신 분야에서 우리가 먼저 개방과 소통을 진행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북 간 상호개방은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전 세계가 전례 없는 폭염, 가뭄, 홍수 등을 겪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은 당연한 현안이자 국경이 없는 문제입니다.
-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그린데탕트를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산림·식수·위생분야의 협력을 시작으로, 마을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비무장지대(DMZ)를 생태, 문화,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담은 세계적인 협력·소통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습니다.

- 약 30년 전에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 그 과정에서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재점화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개요

- 발표 '94.8.15. 광복절 계기, 김영삼 대통령 발표
- 배경 국민 의견 수렴, 국회 공청회, 여야 간 초당적 합의를 통해 수립한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89.9.11.) 내용을 계승 및 보완·발전
- 내용 자주, 평화, 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를 단계적으로 추진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통일준비는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 통일기반조성계획 수립, 통일준비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기반조성법」 제정을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각계 국민의 참여를 통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이 통일·대북정책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국적인 '사회적 대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질 높은 통일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종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별 거점을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개선을 위해 뉴미디어,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통일 공공외교 활동 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민간·재외동포의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부록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관련 문답자료

비핵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

[부록]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관련 문답자료

Q 「담대한 구상」과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역대 정부 북핵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발전된 해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비핵·개방·3000」이 비핵화 이후 제공되는 경제 분야 상응조치 중심의 계획이라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구상입니다.
 - 또한,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3000」과 달리 북한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여 경제지원 뿐 아니라, 북한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치·군사 분야 조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담대한 구상」에서 정치·군사분야 조치들은 언제 구체화 되는지요?

- 정치·군사 분야의 주요 사안으로는 미북관계 개선 및 정상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평화체제 구축 등이 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정치·군사분야 조치들은 남북한 외에 미국 등 당사국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 상호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며 추진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정해서 공개하기는 어려우며, 협상이 시작되면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 「담대한 구상」은 역대 정부의 북한 비핵화 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현 시점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행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 실효적인 구상인 만큼,
 -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기대합니다.
- 정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Q 6.15 남북공동선언, 판문점선언 등 기존의 남북 합의는 계승하나요?

- 통일·대북정책은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토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윤석열 정부도 그간의 대북정책을 ‘이어달리기’ 하면서 성과를 계승하는 동시에 과거의 잘못된 점은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역대 정부가 체결한 남북 합의는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이며, 남북관계 발전과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Q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도지원이 필요한가요?

-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취약한 식량·보건의료 상황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생존권의 문제이자, 같은 동포로서 도외시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입니다.
-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견지에서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배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Q 대북제재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병행될 수 있나요?

-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교류협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제재의 틀 내에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이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순수 사회문화교류 등은 제재의 직접적 대상이 아닌 만큼 북한의 호응만 있다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민생분야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산림·식수·위생분야 등의 협력은 제재면제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남북간 협력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대한 구상」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비핵화 진전 시 이에 발맞추어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통일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TEL 1577-1365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